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2월

올 연구사업 '농업 성장 및 혁신 역량 발굴, 농산촌 활력제고'에 역점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 시작, 연구사업 본격 착수



2월 21일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리 연구원은 2월 21일 소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과 전략' 과제의 연구설계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기본과제 연구설계세미나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어진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연구사업의 목표를 '개방의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의 성장 및 혁신역량을 발굴하고, 농산촌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연구 수행'으로 설정하였다.

FTA 협상과 DDA 농업협상 대응 연구

이와 함께 연구의 기본 방향을 △생명공학기술(BT), 수출농업, 혁신적 농업경영체 등 농업의 성장 동력 연구, △생산 및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및 안전 농식품 공급 연구,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 연구,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농산촌 지역 발전 연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대응 연구, △농업인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로 정하고 21개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의 내실화와 품질제고에 주력

우리 연구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기본연구 과제수를 줄이고 대형화 하는 등 연구의 내실화와 품질제고에 역점을 뒀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명과 대표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기본연구과제>

-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박대식)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송미령)
-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 에 관한 연구(정기환)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박시현)
-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과 농정 변화 분석(김영훈)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전략(권오복)
- △중국의 농산물 수급 증장기 전망(어명근)
- △DDA 농업 분야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C/S(Country Schedule)작성 방향(조규대)
-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방향 연구(황의식)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김태곤)
- △농업법인경영체의 유형별 운영 실태와 발전 전략(김수석)
-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김정호)
- △소비자의 수입쌀 가치평가 및 대체효과 분석(박동규)
- △전통식품의 상품화 추진 방안(이계임)
- △농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성 확보방안(최지현)
-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송주호)
- △농업 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과 전략(강창용)
- △기후협약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 영향 및 대응방안(김창길)
- △FTA/DDA 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 전략(박문호)
- △주요 농산물 가격의 변동 구조 연구(이용선)
-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수급분석 및 전망(이상민)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 자리”

김성훈 상지대 총장 초청, 월례 초청강연 열어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 자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2월 1일 대회의실에서 김성훈 상지대 총장을 초청해 월례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특강에 앞서 최정섭 원장은 최근 우리 연구원이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과 계간 ‘농촌경제’가 학술지로 등재된 것, 기본연구보고서 500호를 발간한 것에 대해 전 직원이 모두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김성훈 상지대 총장이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 자리: 농업경제학 연구의 고민과 발자취’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 총장은 “우리 농업은 완전 개방 체제로 돌입하여 전환기에 놓여 있다” 진단하며,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정상으로 올라가 시작점에서 길을 찾듯이 농업경제학도 전환기에 놓인 우리 농업과 함께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농업경제학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우리 경제가 ‘K’를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은 농민을 살려야 농업·농촌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사람 중심의 농정철학이 있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도 농민을 살리는 농업경제학과 농업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정치학, 사회학, 철학을 더욱 깊이 익혀 광범위한 통찰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전환기 농업경제 연구자에게 필요하

다”고 말하며 농업경제학자들에게 역량강화에 힘쓰길 당부했다. (강연 요약 7, 8면)

미주리대 벨슨 교수 내원, 연구협력 협의



미국 미주리대 제리 벨슨 교수가 2월 20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최정섭 원

장을 만나, 농업분야의 농산물 무역, 농촌 개발, 품목 연구 등 미주리대학과의 연구 협력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최 원장은 벨슨 교수와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군 단위의 정책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책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미주리대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연구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계절별 수급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모델 개발을 추진키로 하여 농업관측사업 등 품목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검색엔진 도입 연구에 활용

우리 연구원은 연구를 돕기 위해 메타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 22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연구원이 도입한 메타검색 엔진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여러 개의 정보원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엔진으로, 앞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구원 자료정보지원실은 메타검색의 이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월 24일 중회의실에서 이패스 주식회사 김상권 대표를 초청하여 메타검색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사용법 교육을 하였다.

업무 혁신을 위한 BPR 교육 실시



업무 혁신을 위한 BPR 교육을 2월 3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업무 계획을 알차게 수립,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2월 3일 대회의실에서 업무프로세스 개선(BPR) 교육을 가졌다.

이날 실시한 BPR 교육은 현대자동차 업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토에버의 정희연 팀장이 ‘기업의 경영혁신 실무기반의 BPR(PT)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의 하였다.

정 팀장은 이날 강의

를 통해 연구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경영에 대해 일러 주며, 업무혁신(PI)의 추진 전략과 방법, 그리고 PI의 성공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잘 활용해야”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정책세미나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대회의실에서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개최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통상협상전략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제1부 세미나가 윤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조규대 전문연구원이 '농업 부문 협상의제의 원활한 해결 방안' 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전문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DDA 협상은 올해 4월말까지 농업·NAMA 분야의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합의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협상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가 고율관세 품목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리 농정이 감축대상보조에서 블루박스과 그린박스로 전환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수출국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가 '비농

산물의 시장접근 전략' 이란 제목으로, 외교통상부 천준호 통상분쟁해결과장이 'DDA 서비스 협상 동향과 대응 방향' 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했다.

세미나 2부는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사회로 세미나가 열려, 외교통상부 윤강현 세계무역기구과장이 'DDA 규범협상의 쟁점분석 및 협상전략' 이란 제목으로,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 라는 제목으로, 재정경제부 홍재문 DDA대책반 담당팀장이 'DDA 개발 분야 협상동향과 대응 방안' 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어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 사회로 종합 토론이 열려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WTO/DDA 협상 전략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을 하였다.

EU 농업 관련 KREI 세미나 열어



우리 연구원은 2월 3일 중회의실에서 주 EU 김종철 농무관을 초청, 'EU 농업정책 2005년 주요 동향과 2006년 전망' 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종철 농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05년 EU 농정분야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은 설탕분야 개혁, 도하 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2007년~2013년 농촌개발정책 방향”이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또한 김 농무관은 올해 ECU의 농정현안 과제를 DDA 농업협상, 공동농업정책의 간소화(CAP)와 정책의 개혁 마무리, 전통농산물과 유전자변형농산물 간 공존 문제, 생물에너지 생산 및 사용촉진 문제라고 진단하며 각 과제별 현안을 밝혔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대안개발’ 워크숍 개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대안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2월 8일 열었다.

우리 연구원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대안개발’ 연구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2월 8일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경 목원대 교수는

‘중앙-시군단위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촌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 생활환경 사업개선 메뉴 개발’ 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농특위,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 기관 참석자들과 연구참여자들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추진을 위한 농촌개발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향과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초 생활환경 등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수입쌀 유통, 쌀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수입쌀이 유통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해 그룹 간에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충돌하고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품질이 좋은 쌀을 구입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는다. 중국이나 미국산 쌀은 품질이 우수하며 국내산 보다 4배 이상 저렴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쌀가공업체와 생산자는 저렴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어 쌀가격이 급락하고 쌀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안해한다. 수입부터 중간 유통단계까지 정부가 수입쌀을 관리하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쌀 시장유통의 큰 의미는 소비자가 수입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쌀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는 데에 있다. 앞으로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쌀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발견하고 경쟁력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쌀 유통은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

이달부터 수입쌀이 유통되는 것은 2004년도 쌀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첫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되 매년 의무수입량을 늘리며 수입량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총수입량은 2005년도 22만 5,575 톤에서 2014년까지 40만 8,700톤까지 늘어나며, 이중 밥쌀용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동일 기간 동안 2만 2,557톤에서 12만 2,610톤으로 늘어난다. 작년에 밥쌀용으로 유통되어야 할 물량이 국회비준이 늦어진 관계로 올해에 수입·유통되고 2006년도 할당물량 3만 4,429톤도 연내에 수입될 예정이다.

쌀 수입 및 판매는 정부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과거 수입 실적에 기초하여 국별

로 쿼터를 배정한 결과 밥쌀용 국별 수입량 비중은 중국산 단립종 56.6%, 미국산 중립종 24.4%, 호주산 단립종 4.4%, 태국산 장립종 14.6% 등이다.

정부는 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미국산 밥쌀용 5,504톤이 모두 낙찰되어 이달 하순에 국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쌀은 20kg, 10kg 단위의 포장형태로 수입되며 소비자 수요에 맞도록 1등급과 3등급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쌀시장에 혼란은 없을 것

정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쌀을 수입하고,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매한다.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공매하므로 낙찰가격은 수입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 간의 가격 차이가 크므로 정부가 수입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유통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쌀협상 상대국도 우리나라가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쌀을 관리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수입차익은 공매할 때의 예정가격과 입찰 참여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장안정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수입차익이 많아질 수 있지만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상을 확대할수록 낙찰가격은 올라가고 수입차익은 커질 수 있다. 입찰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저렴한 수입쌀이 시장에 방출되어 쌀가격이 폭락하는 등 유통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밥쌀용 수입으로 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쌀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양곡관리법상 원산지, 생산년도, 품종, 중량 등의 사항을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수입쌀도 표시제를 준

수해야 한다. 수출국에서 포장 하기 전에 표시사항 등을 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부정유통 벌칙을 강화하였다. 올해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있다.

명예감시원제도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수입쌀 특별 단속반 등을 통하여 부정유통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유통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정유통을 할 동기가 매우 적어졌다.

관세화에 대응하는 기회로 삼아야

2014년 이후에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누구든지 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업자가 다양한 유통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할 수도 있고, 유통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하는 국가도 예상외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쌀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국내 쌀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수입쌀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수입쌀 관리 목적이 시장안정에 치우쳐 수입쌀 가치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수입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수입쌀 가치가 생산자와 정부에 쌀산업 경쟁력 제고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수입쌀을 공매할 때 예정가격은 적정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여자도 가능하면 제한이 없어야 한다.

2월 회의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나

조 규 대 전문연구원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4월 말에 세부원칙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국이 의견을 조율하며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시된 일정 내에 완전한 세부원칙이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미국과 EU가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의외로 쉽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협상에서는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공세적인 그러나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EU는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감품목 대우 견해 차 못 좁혀

이번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장접근 분야, 국내보조 분야, 그리고 수출경쟁분야에서 회원국간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미국과 EU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과 G20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장접근 분야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민감품목이란 쉽게 말해 시장접근 폭을 예외적으로 줄여주기로 합의한 품목들로 관세감축률을 일반품목에 비해 줄여주는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증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회의에서는 주로 TRQ증량 폭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미국 등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 폭을 늘리려는 입장을 EU와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은 그 폭을 줄이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TRQ 증량 폭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함한, 예를 들어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 TRQ 증량 폭

적용, 일반 관세감축 폭으로부터의 이탈을 반영하여 추가 TRQ 증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EU와 G-10이 반발하여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마감되었다.

미국 블루박스 문제, 수세적 입장

EU와 G20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내보조분야 회의에서는 국내보조 감축 구간 경계,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 여부, 품목 특정 감축대상 보조의 상한 설정 기준, 그린박스 규정의 재검토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미국의 경기조정 직접지불(Counter Cyclical Payment: CCP)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G-20과 EU가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마련을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하였고 미국은 신규 블루박스와 관련하여 자국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제안에서 추가적으로 양보는 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미국의 CCP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쌀에 지불하는 변동직접지불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로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원조 문제에 대한 논의 계속

이번회의에서는 수출경쟁분야 중 식량원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원조를 정의하는 문제와 일반 식량원조의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안전박스(safe box) 요건

인 긴급 상황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 WTO 차원의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이나 정의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일반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역시 EU가 미국을 겨냥해 주장하고 있는 식량원조의 현금화 및 재수출에 대한 규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현금화 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과 EU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였지만, 재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월 회의가 합의안 도출 분수령

지난 1월 협상이 홍콩 각료회의를 평가하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상이었다면 이번 2월 협상은 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해 미국, EU, G-20, G-10 등 주요 그룹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G-6)들은 농업위원회 회의와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협상이 이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협상 진행 과정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협상의 진행 속도는 부진하지만,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G-6의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3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G-6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G-6 논의 결과와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3월 협상(3.20-3.24)이 4월 말 세부원칙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기쁘게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 문건으로 채택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와 국무원은 2006년도 '중앙1호문건'을 지난 2월 21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1호문건의 타이틀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다. 이로써 3년 연속 농업·농촌·농민문제(3농문제)가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되었다. 2004년은 농민소득 증대, 2005년은 농업생산력 향상, 그리고 금년은 농촌종합개발에 국력을 집중한다는 의도이다(본지 2005년 2월호, 10월호 참조).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것이며, 관민합작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이다. 이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이다. 이 때 2006년부터 5년간의 국가운영 중기지침인 제11차 5개년 계획(11.5)을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신농촌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이 포함되었다.

배경에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국가단계의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와 생활격차 확대, 그리고 교육의료 등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마치 마오쩌둥 혁명 전야와 같은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요인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1978년 이후 계속되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농업과 비농업간 성장격차의 발생에 있으며, 여기에 2001년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과 동시에 각종 제도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농간 격차를 가속화하였던 것이다.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상황

특히 도시·농촌을 양분화하고 있는 것이 호적제도이다. 중국은 1958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하여 국민을 농민과 비농민(도시민)으로 구분하여, 농민에서 도시민으로 호적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이 호적은 현재에도 거주이전 제한은 물론이고,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도시로의 단기적인 취업은 가능하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 성내 중소도시까지는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로의 이전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이것이 도농간 고용기회 차별과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도시·농촌이라는 이중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가 현재 역 단위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 압력(首流)으로 작용하고 있고, 도시주민은 이를 범죄예비군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호문건을 결정하면서 최근 농

업·농촌상황에 대해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사회자본이 취약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있다.

1호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문건은 8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농업·농촌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문제를 개선해 간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11.5'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가 농촌발전을 선도해야

신농촌건설의 목적은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절대 다수의 농촌인구가 여유로운 생활을 가져야만 사회발전의 성과를 전체 국민이 수혜하는 길이며, 이로 인해 국내시장을 확대하여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공업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선도하는 체제를 구축, '11.5' 기간 중에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지원 확충과 농업현대화, 식량생산 안정화, 농업구조조정 가속화, 농업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촌민주화와 정신문명 향상, 농민소득 증대 등을 포괄하는 농촌종합개혁을 통하여 신농촌건설의 양호한 국면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투자우선순위를 농업·농촌에 두되, '지원은 많이, 부담은 적게, 규제는 완화하여'(多予少取放活), 도시와 농촌을 단일 요소시장으로 형성하여 활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11.5' 기간 중에 식량생산 5억톤(2005년은 4억 8,400만톤), 농민소득 증가율 6% 등의 수치 목표가 결정된다.

지난 2월 22일 국무원 공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中央財政經濟領導小組) 부주임 천시원(陳錫文)은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확실한 성장을 달성하여 농촌건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 이번 신농촌건설은 단순한 방향 제시나 농민에 대한 비전 제공이 아니라 "각급 당과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을 공동참모로 인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문제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공중앙은 그 동안 농업노동력을 도시에서 대폭 흡수하여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농업보호를 통하여 농촌 내에서 과잉노동력을 소화하여 사회안정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해왔다. 이번 1호문건으로 중국 정부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김태곤 연구위원>

전환기 한국농업경제학자의 설 자리

- 농업 경제학연구의 고민과 발자취 -

김 성 훈 상시대 총장

연구원 영문 이름에 '농촌(Rura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농업' 이 아닌 '농민과 농촌'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 농촌은 완전 개방되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다. 정상에서 시내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한국농업경제학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

시장경제, 윤리·도덕 수반되어야

그 동안 우리 농업경제학계는 경제현상을 분석하거나 경제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효율성과 시장경제원리에 몰입해 불완전한 데이터에 의존한 계량적 분석모델로 해답을 구하고 처방해 온 과정에서 정작 사람을 놓치고 농업생산력 주체의 열망을 뒤로한 부분 분석자로 전락해 왔다. 이런 접근방법에는 실제 인간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다. 그것을 신자유주적 분석의 틀이라고 자위하여 왔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보다 더 심혈을 쏟았던 '도덕감정론'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간과하여 왔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발전과 상호협조관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경제주체간에 협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간의 '신뢰'라고 말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 경제학 교과서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실제 경제현상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오늘날 당면한 농촌문제를 푸는 키 중

에 마스터키는 경제구성체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이라고 본다.

진리, 따뜻한 가슴 가질 때 발견

'따뜻한 심장에 냉철한 이성'을 말한 알프레드 마샬은 어떻게 인간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전쟁과 같은 인류의 모든 해악의 근원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경제를 연구하는 뚜렷한 목적의식, 즉 철학이 부재한 기계적인 분석은 경제학이 아니다. "진리는 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질 때 보여지고 찾아진다"라는 신념으로 인간중심의 경제학을 표방하였다. 스미스, 마샬 등 초기 근대 경제학자들의 경제사상이 이리했다. 농촌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따뜻한 가슴이 빠져버린 농업연구를 한다면 이는 농업경제학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과 같다.

막스웨버가 학문연구에 있어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몰가치론'을 편 것은 실증 연구방법론의 불편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정책연구의 목적과 의지를 꺾으려함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빗대어 사람사랑, 농촌사랑에 대한 애정이 결핍한 기계적인 연구를 합리화 한다든지 안이하게 시장왜곡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농업경제학의 본령과 멀다고 본다.

농경제, 농민 살리는 데 목적 뒀어

연구방법에만 적용되는 몰가치론에 대하여 사람 살리라는 목적의식과 실제적 처방 부분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은 아전인수식 합리화이다. 요컨대, 농촌경제 연구의 시작은 농민을 살리는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제연구는 '경제학(세상을 구하는 학문)'이었다.

현대경제학은 역사학, 사회학, 철학, 정책학 등 여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계량화만을 강조하는 부분 학문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100% 가동된다고 가정한 미국경제모델에서 통하던 계량경제학을 가지고 역사와 문화, 전통 철학과 사상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의 농촌경제에 직접 응용하는 것은 시작부터 오류를 내포한다. 우리는 많은 사회, 문화·역사적인 요소들을 그동안 고려대상에서 너무 오래 잊어왔다.

혼도 있고 피와 살도 있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오직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계량경제학 모델은 그래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현실세계에서 종종 과학성을 과시하지만 결코 과학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

경제학 해법, 사람으로부터 찾아야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태의 가족농(소농)체제의 현실에 미국식 경제학의 대안들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많은 정책 대안들의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로 환산한 우리의 국력이 세계 11위라고 하는데, 이것에 오버랩하여 국민 15%를 차지하는 716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GDP가 올라가면 빈곤층 또한 증가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땅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5%가 83%의 국토를 소유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 세계 12위 무역대국의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세계 136위라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양극화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대경제학은 전환기 또는 혼란기에 빠져들고 있다. (8면에 계속)

2006년 부서별 업무혁신보고회 가져

혁신과제 발굴 및 업무추진 관련 활발하게 토론



업무혁신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부서별 업무혁신보고회를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올해부터 기존의 부서별업무보고회의 형식과 틀을 바꿔 연구부서는 사회적 의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방안, 대외협력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했다. 그리고 연구지원부서는 업무개선과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의제별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여 연구와 지원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

업무혁신보고회 첫째날엔 연구지원부서와 농업관측정보센터가, 둘째날엔 연구부

서가 올해 추진할 주요 혁신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업무혁신보고회를 통해 나누는 결과를 올해 업무에 반영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진 동정

△허덕 연구위원은 2월 23일 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다.

△김홍상 연구위원은 2월 1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 농업의 가치 충돌'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다.

△황의식 연구위원, 강혜정 전문연구원은 2월 16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FTA 추진에 따른 농가별 소득변동분

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2월 8일 농림부에서 개최한 지역 단위 양분총량제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2월 23일은 김태영 연구원과 한국축산경영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잉여양분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2월 16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정책의 환경 기준 도입과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2월 23일 미트저널 창간 1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2006년 한국 소비 경제와 육류시장 대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권오복 연구위원은 2월 15일 농수축산신문사가 개최한 한-미 FTA 관련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영생 전문연구원은 2월 22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인적자원개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 연구원 인사

△(복직) 연구위원 최경환(농촌발전연구센터)

△(신규임용) 전문연구원 우병준(농산업경제연구센터), 3급관리원 김민철(행정실), 연구원 김원태, 김재한, 윤종열(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요한(산림정책연구실)

<7면에 이어>

농업부문에만 한정해 볼 때 더욱 모순투성이다. 최근 절대농지에 대해서까지 비농민들의 무제한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농업(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인 방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사회학과 철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렇게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가치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몰가치론에 기초해서 학문을 배웠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왜 경제학을 암울한 학문(Gloomy Science)라 부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학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실존하지도 않은 경제인(Homo Economicus)만을 분석과 연구대상으로 삼아온데 근원이 있다. 피와 살도 있고 혼도 가지고 있는 인간(Homo Sapiens)을 연구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과 관련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전통, 환경, 경관 등 제요소를 농업·농촌연구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국가별, 지역별 농업과 식량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연구자 넓은 통찰능력 겸비해야

이런 다원적인 사고방식을 전제한 경제학(經世學)이 전환기 농업경제학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출발점을 뜻한다. 사람(농민)을 살리기 위해 사람문제 해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농촌, 농업의 파괴는 시간문제이다. 시장수급 및 가격원리가 100% 적용되지 않는 경제학의 사각지

대가 우리 농촌부문에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분석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사람이 기본이 되는 따뜻한 학문'을 가지는 것이다. 애정과 정열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바로 보일 수 있다. 농업농촌부문에서는 J. 롤즈의 "최약자 보호원칙"이라든지 J.R. Hicks의 "보상의 원칙"들이 널리 준용되어야 한다.

한국농촌 문제와 미래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하길 바란다. 신고전학과, 신자유주의 농업경제학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다시 산정상에 올라가서 올바르게 내려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역사, 문화, 정치학, 사회학, 철학을 더욱 깊이 익혀 광범위한 통찰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전환기 농업경제 연구자에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다.